

학교 비정규직 대학 청소·경비 우체국 비정규직

투쟁을 지지하라

비정규직 투쟁
경기 방과후코디,
연세대 청소노동자,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3, 6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사회적 대화 회의론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 주다

6~7면

산재 사망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체제가 낳은 참사

8면

이재용 석방
촛불 염원 거스른
법원 규탄
부패로 쌓아 올린
삼성

4~5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총리의
중국 방문이
보여 주는 것

5면

낙태죄 폐지

아일랜드 사회주의자
의원의 연설
가톨릭 반낙태 운동은
여성의 건강과 생명 외면

2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새 임금체계의
문제점

3면

여성의 삶과 건강 외면하는 가톨릭 반낙태 운동

최미진

낙태죄 폐지 여론이 높아지자 가톨릭 교회는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으로 맞불을 놓았다. 사제들에게 미사 때마다 신자들에게 서명 동참을 호소하라는 지침을 내렸을 뿐 아니라, 서명 대상을 일반인으로도 확대했다. 가톨릭 교회는 이 서명을 낙태죄 위험 심판이 예정된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

가톨릭 교회는 태아에게 “생명권”이 있고, 낙태가 “살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태아가 모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삶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로 중요한 점은 쏙 빼놓고 하는 얘기다.

본지가 강조해 왔듯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가 인간이라는 것(2~4세기와 17세기 이후의 가톨릭 교리, 5~16세기의 교리는 상충됐다.)은 어불성설이다. “수정되는 순간 생명”이라는 비오 9세(1846~1878년 재임)와 레오 13세(1878~1903년 재임)의 이 교리는 결국 이미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여성보다 태아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으로, 본질적으로 여성을 태아의 인큐베이터로 여긴다는 점에서 여성차별적이다.

가톨릭 교회의 진보파는 낙태 금지가 여성의 생명과 건강, 삶에 미치는 영향을 극히 중시해야 한다. 여성은 언제든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될 수 있고, 자신이나 가족의 삶을 위해 원치



지난해 12월 낙태죄 폐지 집회 “생명 중시”는 여성의 삶을 빼놓고는 거론할 수 없다

않는 임신을 중단하는 데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이웃 사랑”에서 빠진 여성의 삶과 건강

낙태 금지가 미치는 영향은 계급에 따라 상이하다. 가톨릭 교회의 낙태죄 수호 운동은 결국 우리 사회에서 힘 없고 가난한 여성들을 내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부유한 여성들은 낙태가 불법이어도 자신의 부를 이용해 안전한 시술을 받

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계급과 가난한 여성들, 여성 청소년들의 현실은 다르다. 서구에서 낙태가 불법인 시절 가난한 여성들은 위험천만한 뒷골목 낙태로 내몰렸다. 한 국에서도 낙태 단속·처벌이 예고될 때면 노동계급 여성들은 치솟은 낙태 비용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여성 노동자들은 낙태 시술을 받아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아픈 몸을 끌고 출근해야 한다.

더럽고 차디찬 화장실에서 원치 않는 출산을 해야 하는 청소년들도 있다.

결국 문제는 위험하고 값비싼 낙태로 여성들을 내몰 것인가 아니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로 여성의 삶과 건강을 보호할 것인가이다.

이런 명백한 현실 앞에서 일부 가톨릭 신자들조차 ‘왜 교회가 말하는 생명에 여성의 생명과 건강과 삶은 없는가’하고 반문한다.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이웃 사랑”에 정작 여성의 삶, 특히 노동계급과 빈곤층 여성의 삶은 빠져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가톨릭 교회의 낙태죄 수호 운동은 결국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로나 취급하는 지배계급의 여성 차별을 도울 뿐이다.

진보 가톨릭계

자본가들과 자본주의 국가는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동력 공급에 사회적 이해관계가 있다. 하지만 그 부담은 주되게 노동계급 가족(특히 여성)에게 전가해 왔다.

이 때문에 지배자들은 여성의 재생산(임신과 출산)을 자본 축적에 종속시키고 통제하려 애써 왔다.

한국의 지배자들이 낙태를 금지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본주의 국가의 수장으로서는 이런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기에 낙태죄 폐지에 소극적인 것이다.

낙태죄 폐지 청와대 청원 이후 안타깝게도 진보 가톨릭 언론 대부분은 유

독 낙태죄 폐지에는 침묵하거나 교회의 낙태죄 방어 운동만 소개하고 있다.

“생명” 중시는 인류의 절반인 여성의 생명과 건강, 삶을 빼놓고는 거론할 수 없다는 점, 낙태죄 유지가 과연 누구의 이해관계에 이바지하는지 등을 진보 가톨릭 언론들은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일부 진보 가톨릭 언론과 신학자들은 낙태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교회의 낙태죄 방어 운동도 지지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들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다 소중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낙태 반대론자들의 비정한 태도와 달리, 낙태하는 여성의 고통을 보듬어야 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낫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 태아가 인간 또는 인격이라고 전제하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일관되게 옹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로 화해할 수 없는 것을 화해시키려 하면 낙태죄로 인한 여성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올해도 현재 심판 전후로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첨예하게 이어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낙태죄 폐지에 거리를 두고 가톨릭 교회의 눈치를 보며 줄타기하고 있고, 현재는 보수적인 국가기관이다. 그러므로 아래로부터 운동이 강력하지 않다면 낙태죄 폐지는 장담할 수 없다.

낙태죄 폐지와 여성의 낙태 권리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건설하자.

아일랜드 사회주의자 의원 브리드 스미스의 의회 연설

“낙태 금지 헌법을 폐지하고 어두운 역사를 청산합시다”

아일랜드에서는 5월 말 낙태금지법 폐지를 묻는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다음은 낙태권 운동의 주요 활동가이자 ‘이윤보다 인간을’ 소속 사회주의자 국회의원 브리드 스미스(사진)가 1월 말 아일랜드 의회에서 낙태권을 옹호하며 한 연설을 축약 번역한 것이다.



연명치료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4년, 강간당한 한 여성난민은 자신의 의지에 반해 강제로 임신을 지속해야 했습니다. 그 외에도 고통받은 여성들의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낙태를 둘러싼 이슈에는 사회경제적 요소가 다분합니다. 돈만 있으면 아일랜드에서도 언제든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만 있다면 언제든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서 돈을 내고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여성, 난민 여성, 직장에 휴가를 낼 여유도 돈도 없는 여성이라면 낙태를 금지하는 조항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저는 의료진과 의학 전문가들이 이 사회에서 존경받아야 하고 여성을 도

울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여성들이 긴밀한 조력 속에서 자신의 신체와 건강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신 기간은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선택할 수 없는 유일한 기간입니다. 제가 아는 여성들 중에는, 유산했는데도 의사가 유도분만할 때까지 20~25시간 동안 지켜보자고 해서 그 긴 시간 동안 끔찍한 고통을 겪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50대 후반인] 제 나이의 많은 여성들이 이로 인해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안전한 낙태 시술을 무상으로

[낙태 금지를 명문화 한 1983년의] 8차 개헌을 지키는 것이 고결한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옹호하는 것은 이 나라의 어두운 역사일 뿐입니다. 8차 개헌을 옹호함으로써 태아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 누구도 다른 이에게 강제로 임신할 것을 강요하거나 임신을 지속할 것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은 무슨 방법이든

찾아서 임신을 중단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렇기에 쟁점은 합법화된 낙태인가 불법화된 낙태인가로 귀결됩니다. 낙태시술을 받기 위해 여성들이 영국이나 네덜란드 등지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속해야 할까요? 14년 징역형이라는 끔찍한 현실 때문에 젊은 여성들이 부모에게조차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어떤 의학적 조언 없이 구한 약을 자기 침대에서 삼키도록 만들어야 할까요?

저는 아일랜드 헌법에서 8차 개헌 내용을 완전히 삭제하고 무상으로 안전한 낙태시술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는 이미 태어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5명 중 1명이 빈곤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은 피와 살로 이루어진 진짜 인간이지만 몸을 낚고 쉴 공간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일랜드는 유엔 협약에 보장된 장애인에 대한 권리 보호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이 없는 아이들이 노숙인 보호소에 수용됩니다. 만약 생명이 그토록 소중하고 고귀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우리가 벌이는 투쟁에 함께합시다. 장애인 차별을 없애고, 노숙인들에게

살 곳을 제공하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싸웁시다. 긴축을 막고 인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활동에 함께합시다. 저처럼 여성의 선택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성의 선택권에는 아이를 가질 권리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을 권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 집이 없다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면, 일자리가 없다면, 즉 존중과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결정권은 두 가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임신에 대한 통제권과 아이를 가질 권리 두 가지 모두입니다. 그런 결정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바로 우리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미래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녹취·번역 이예송

Q. 용어설명

‘X 사건’

1992년, 강간으로 임신한 14세 여성이 낙태 시술을 받으려 영국으로 건너가려 하자 정부는 출국을 금지했다.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 결국 대법원이 정부의 출국 금지 명령을 무효화했다.

방과후코디 노동자들

경기교육청의 기만적 제안을 거부하다

방과후코디 노동자들이 경기도 교육청의 집단 해고에 맞서 투쟁을 이어 나가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전환 심의위원회 결과 후속조치’ 공문을 학교들로 내려 보내 방과후코디* 노동자와 진로직업 지원가 등을 집단 해고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대부분 초단기 저임금 여성 노동자들인 이들을 만만하게 봤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방과후코디 노동자들은 해고 통보에 굴하지 않고 저항하고 있다. 노조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되는 여성 노동자들이 한파 속에서도 오체투지 행진과 삼보일배 행진까지 하는 등 놀라운 투지를 보여 주고 있다.

방과후코디 노동자들의 저항이 지속되고 연대가 확산되자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기만적 제안을 했다. 해고를 1년 유예하겠다고 한 것이다. 홍승희 경기지역 방과후코디 분과장은 이 제안을 거부하고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연대가 더욱 확산돼야 한다

연대를 확대하자

“1년 유예는 방과후코디가 없으면 당장 방과후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니 준비할 시간을 준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1년 있다가 해고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까. 1년 유예 받아들이 수 없습니다.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2월 1일 수원역에서 개최된 결의 대회에는 연대 단체들이 많이 참석했다. 특히 아주대 시설관리 노동자들, 용인대 비정규직 노동자들 등 지역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참가해 투쟁을 응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건설노조 경기남부 타워크레인지부 노동안전보건위원회

노동자들은 연대의 뜻으로 모금한 돈을 전달했다.

이 집회에서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방과후코디 노동자들의 투쟁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지자체, 행정 기관에서 2월, 3월은 중요한 달입니다. 2월에 거의 60~70퍼센트의 정규직 전환

이 어떻게 될지 결정됩니다. 2월, 3월에 잘 싸워야지 2단계 정규직 전환, 3단계 정규직 전환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쟁이 승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지원과 연대는 계속 확대돼야 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항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실체를 드러냈다. 또, 노정교섭이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 의존해서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보장받을 수 없고,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들의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도 보여 주고 있다.

이 투쟁이 승리한다면 앞으로 벌어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대책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실제 이 투쟁의 효과로, 최근 전북 교육청은 방과후코디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 부산 교육청은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라는 공문을 학교들에 내려 보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연대를 보내자.

강철구

Q 용어설명

방과후코디

방과후코디는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상시업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다.

서울 서부 단체들,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 지지

“연세대는 퇴직 인력만큼 신규채용 하라!”

2월 6일 ‘연세대 투쟁승리를 위한 서부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서부지역 대책위’)가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연말부터 서울 소재 일부 대학 당국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년 퇴직한 자리를 신규 채용 대신 단시간 노동자로 대체하려 했다. 그래서 이에 맞선 투쟁이 이어졌다. 연세대학교 청소·경비 노동자들도 정년 퇴직으로 생긴 일자리 31개에 대한 신규 채용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첫 발언에 나선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분회 이경자 분회장은 학교 측이 하루 전에 교섭을 요청해 왔지만 기만적인 안을 제시해 교섭이 결렬됐다고 보고했다. 일자리 31명개 중 극히 일부만, 그것도 조건부로 신규채용하겠다는 안이었다.

“총무처장은 지금 학교 측이 가져올 수 있는 최선의 안이 이거라고 합니다. 더 나은 안을 가져오려면, 등록금과 입학금이 들어오고 나서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야 예산안이 확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도 사발할 각오까지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죽을 각오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중당 서대문구위원회 박희진

위원장은 “한 해에 국고보조금을 3100억 원이나 받는 연세대가 학생들뿐 아니라 노동자들, 학내 구성원들을 위해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대학교육연구소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는 전국 사립대 중 국고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다.

나는 ‘연세대학교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학생으로서 발언했다. “부자대학 연세대는 지난해 여름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아무 것도 공헌한 것이 없는 반기문을 글로벌사회공헌원 명예원장으로 임명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연세대학교 당국을 규탄하는 연세대 분회장

깊이 참여하는 대학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연세대는 사회문제

“해결”은커녕 문제를 만들어 내는 대학이 됐습니다.”

2월 7일 연세대는 이날연 국무총리, 최태원 SK그룹 회장,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을 초청해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포럼”을 개최한다.

서부지역 대책위는 연세대학교 당국의 기만적인 태도를 규탄하며 이 포럼 기간을 포함해 노동자들의 투쟁이 끝날 때까지 기자회견과 서명운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경지부 연세대분회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자.

오제현 연세대학교 학생,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

광범한 지지를 확인한 신촌 거리 서명 운동

2월 6일 오후 6시부터 한 시간가량 신촌 유플렉스 광장에서 ‘서부지역 공동대책위’가 홍보전 겸 서명운동을 펼쳤다. 손이 얼 것 같은 한파에도 신촌 거리를 지나는 청년·학생과 시민의 호응이 뜨거웠다. 길을 가다 멈춰 서서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학생이 많았고 따뜻한 음료수를 주고 가는 시민도 있었다.

연세대학교 노동자들을 비롯해 지역 진보정당과 사회단체 활동가 15명이 홍보전과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한 시간 만에 250명이 서명했다. 준비한 서명 용지가 동이 났다.

이번 홍보전은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반대 투쟁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줬다. 화요일 저녁 신촌 거리 서명 운

동은 학교 당국이 구조조정을 철회할 때까지 매주 계속될 예정이다. 노동자들이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굳건한 연대를 확산시키자!

김중현 연세대학교 학생,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꿈수중단!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 31명 신규채용을 위한 서명운동) 참여 링크: <http://bit.ly/yonsei2018v>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새 임금체계

격차 해소는커녕 저임금과 차별을 고착화할 뿐

정부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무기계약직 전환자에게 적용할 새 임금체계 안(‘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을 내놓았다.

이번 전환 대상 중 약 64퍼센트에 해당하는 청소, 경비, 시설관리, 사무 보조, 조리사 직종이 1차 적용 대상으로 꼽힌다. 정부는 표준임금체계 모델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반으로 확대해 나아가려 한다. 장차 30만 명가량이 이 모델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표준임금체계 모델이 직무급제로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취지를 살리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부가 “격차 해소”와 “공정성” 같은 그럴 듯한 명분을 갖다 붙이는 것과 달리, 표준임금체계는 무기계약직의 저임금 고착화를 가져올 것이다.

표준임금체계 모델에 따르면, 가장 낮은 직무 등급의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또,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상승 폭이 적어, 15년이 걸려 최고 단계로 승급해도 1단계에서 받던 임금의 10퍼센트를 더 받을 수 있을 뿐이다.

표준임금체계 모델이 임금 억제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은 이 방안을 마련한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의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기존 무기계약직의 수당과 임금체계, 호봉체계 등을 그대로 인정”하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새 임금체계인 직무급은 “저숙련 인력”에게 근속에 따른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방법이자, 직무별 임금 차별을 정당화하는 방안인 것이다. 그래서 노동조합들은 정부의 표준임금체계 모델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기계약직이 된 정부청사 노동자들에게 이미 이 모델을 도입했다. 이 사례는 과연 정부가 ‘노동 존중’ 의사가 있는지 의심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저임금 고착화 격정이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님도 보여 준다. 정부청사 환경미화원의 경우 직무등급 1단계 월급이 157만 원이고, 10년을 일해 6단계가 돼도 고작 14만 원 오를 뿐이다.

정부는 올 3월 직무급제를 적용한 ‘공공부문 정규직 임금체계 개편안’도 내놓으려 한다. 기관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신입 사원과 장기 근속자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이다. 그러나 그 방안도 실제로는 정규직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끌어 내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중노총 새 지도부는 노동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실무 TF 확대회의’에 최근 참석했다. 하지만 새 임금체계 논의는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자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민중노총 지도부는 논의 거부에서 더 나아가, 임금 억제와 저임금 고착화 시도를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정원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 2월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아 풀려났다. 핵심 인물로 이재용과 함께 구속됐던 장충기, 박상진, 최지성도 감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유전 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또한 법원이 적폐의 일부임을 자인한 것이기도 하다. 오죽하면 민주노총은 “판결의 결과로 석방된 것이 아니라 석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판결문이 작성”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영수 특검팀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폐 청산을 염원하며 촛불 운동에 동참했던 평범한 대중, 직업병과 노조 탄압(해고 등)으로 고통받아 온 삼성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그야말로 분통 터지는 결과다.

선고 직후, 삼성 직업병 피해자 한혜경 씨의 어머니 김시내 씨는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가? 지난겨울 온 국민이 촛불을 들어 이재용을 구속시켜 여기까지 왔는데, 판사 몇 명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삼성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를 파헤치며 싸워 온 ‘반올림’은 “수조 원의 차명계좌와 비자금 조성, 수백억 원의 정치자금 제공, 노동조합 파괴 등의 범죄가 이제 끝나기를 바랐다”면서, 이재용과 사법부가 사법 정의를 파괴한 “공동 정범”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재용은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받았었다. 삼성 직업병 피해 가족과 반올림, 삼성전자서비스 직원 등은 이 판결도 “범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라고 비판했다. 특검도 즉각 항소했다.

그런데 어찌구무없게도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 부장판사 정형식)는 1심보다도 한참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재벌 총수’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판례’보다도 낫다.

특검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안종범 수첩과 말삼자료, 비서관들의 증언, 박근혜와 최순실의 경제적 관계, 뇌물을 준 대가로 이재용이 삼성에 대한 지배력을 얻었

삼성 이재용 석방 촛불 염원 거스른 법원을 규탄한다



사진:신경환/뉴시스

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이 입증한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정했다. 법원이 인정한 혐의는 승마 지원에 대한 뇌물 혐의 정도다.

이재용의 삼성은 미르재단과 K스프츠 재단에 204억 원을 냈다. 이 재단들은 증거(전 전경련 부회장의 증언)도 있다. 특검은 재단 출연뿐 아니라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주도한 스포츠영재센터와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위한 승마 지원 등까지 삼성이 뇌물 440억 원을 바쳤다고 했다. 이윤을 지상 최대 가치로 삼는 기업주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다는 것이 과

삼성 이재용 석방 촛불 염원 거스른 법원을 규탄한다



사진:신경환/뉴시스

연 앞뒤가 맞는 말일까? 전 청와대홍보수석비서관 김성우 의원은 박근혜와 대기업 총수들의 독대가 “원-원”하는 자리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대통령과의 부정한 거래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켜 얻게 된 이재용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과 경제적 이익은 다른 어떤 뇌물의 대가”(박영수 특검)다.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렇게 비판했다. “이재용이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항소심 판단은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것에 대해 “합병 등 개별 현안이 성공에 이를 경우 삼성전자 등의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등 전후 모순되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 등을 재판부가 대부분 무시했다고도 했다. 이재용의 형량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재산국외도피혐의가 무죄가 된 것에 대해서는 “재산을 국외로 도피할 의사가 아니라 뇌물을 줄 뜻에서 해외로 보냈다는 것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라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일갈했다. 이토록 뻔한 사실을 앞에 두고도 이재용은 박근혜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펴 왔다. 2심 재판부도 사실상 이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이 우파에게는 청신호로 느껴질 것이다. 당장에 자유한국당 홍준표는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기세등등해 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재용이 “희생양”이라면서 2심 재판부를 두둔하고 나섰다. 기업들을 더는 “외풍”에 휘둘리지 않게 하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선고를 앞두고 있는 롯데 신동빈도 오늘 판결을 보면서 적잖이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 최측근들만 단죄하는 선에서 멈추라는 신호인 듯하다. 아마 지배계급 내 여론일 듯하다. 즉, ‘적폐 청산’을 기업인들에게로까지 는 확대하지 말고 적당히 끝내라는 메시지를 문재인 정부와 검찰에게 던진 것이다. 최근 사법부는 전 국방장관 김관진, 이명박 정부의 전 비서관 장석명, 전 국정원 차장 최윤수 등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그 자신이 지배계급의 일부로서 계급 세력 균형에서 쉽게 밀리지 않겠다는 경고였던 셈이다.

반면, 그 부패하고 악독한 박근혜 정부에 저항했던 민주노총 한상균 전 위원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금도 복역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한상균 전 위원장을 사면하지 않고 도리어 2년간 수배와 고초를 겪은 민주노총 이영주 전 사무총장을 구속한 것도 적폐 청산 대상에 반노동·친기업 정책을 포함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혀 우파들을 더 고무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은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우파 정권이 노동계급에 고통을 강요한 것을 바로잡는 데서도 촛불의 염원을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이는 민주당도 노동계급 착취와 천대 문제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아 서일 것이다.

이재용과 박근혜, 부패 비리범들을 제대로 처벌하고 응징해야 한다. 그것이 눈비 맞으며 이 파렴치범들을 구속하라고 요구했던 수백만 촛불이 세우려 한 정의다.

촛불 운동의 염원을 정면에서 거스른 부정부패 법원을 규탄한다!

노동자연대파 2월 5일 발표한 성명을 개정·증보한 것이다.

부패로 쌓아올린 삼성

김지윤

이재용의 부패·비리는 뿌리 깊은 삼성 정경유착의 최심판이다. 2005년 참여연대는 삼성이 그동안 정계에 제공한 불법 정치 자금이 860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그뿐 아니라 정확히 알 수 없는 규모의 비자금으로 행정·사법부에 영향을 끼쳐 왔다.

삼성의 역사는 부패와 비리로 뒤덮여 있다. 이병철은 1938년 삼성의 시조라 할 수 있는 ‘삼성상회’를 세워 부동산과 양조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 중앙전쟁 때 만주의 일본군에게 군량미와 청과물 등을 팔아 돈을 벌어들였다. 이병철은 해방 직후 일본을 방문해 전 조선총독부 수석총무국장 호즈미, 조선식산은행 마산지점장 허다라 등을 만났다가면서 그들의 친분을 자랑했다. 해방 후 적산(일본인들이 남겨 두고 간 재산)과 미국의 원조 자금이 이병철의 사업 밑천이 됐다.

이병철은 독재 정권과도 끈끈한 관계를 이어 갔다. 4·19 혁명에서는 부정 축재자 이병철 차단 요구가 울려 퍼졌다. 5·16 쿠데타 이후 설치된 부정 축재처리위원회는 이병철이 이승만 자유당 정부에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조세 포탈 등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병철은 곧장 한국경제인협회를 만들었고, 박정희는 이병철을 면책해 줬고, 삼성은 기계·화학·전자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갔다.

이병철은 전두환 정권에 8회에 걸쳐 총 220억 원을 바쳤다. 정주영의 현대와 함께 전체 기업 중 1위를 차지했다. 전두환 정권 하에서 삼성은 고속도로 건설, 반도체, 유류사업 등 온갖 사업을 펼칠 수 있었다. 또, 전두환 정권의 부실기업 정리 등으로 삼성 등 일부 대기업들은 자본 축적의 기회를 잡았다. 이견회는 노태우 정권에 9회에 걸쳐 250억 원을 줬다. 1995년 이견회는 노태우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혐의로 소환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년 후 김영삼 정부는 그를 사면했다.

세습

삼성은 김영삼 정권에게서 자동차 산업에 진출할 허가를 받고서 1997년 대선에서 여당인 신한국당에 (밝혀진 것만) 10억 원을 전달했다.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김인주는 김대중 쪽에 5억 원을 건넸다.



이재용 구속·처벌은 박근혜 퇴진 운동의 주요 요구였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서구와 중국의 관계 변화를 보여 준 영국 총리의 중국 방문

이영희

1972년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의 역사적인 중국 방문은 존 애덤스가 오페라<닉슨 인 차이나>로 만들었지만,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와 이의 중국 방문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테리사 메이의 [1월 31일~2월 2일] 중국 방문은 브렉시트를 둘러싼 보수당의 분열 소식으로 언론에서 완전히 잊혀졌다.

그러나 메이의 이번 방문에서는 중국과 서방 열강의 변화하는 관계를 보여 주는 흥미로운 조짐이 보였다. 닉슨의 목표는 소련에 맞서 미국과 중국의 암묵적인 동맹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반면 이제 미국과 유럽연합 모두 갈수록 중국을 지정학적 위협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해 12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라고 명명한 것은, 미국 정책 입안자들 대다수가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던 바를 그저 터놓고 말한 것뿐이다.

영국이 전통적으로 미국을 좇긴 하지만, 메이의 전임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과 그의 재무장관 조지 오즈번은 중국과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맺으려 했다. 그들은 영·중 관계를 새로운 “황금기”에 대해서 떠벌렸었다.

2015년 오즈번 지휘 아래 영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며 미국에 반항하기까지 했다. 아시아인프라투자는 행은 중국이 미국 주도 세계은행 같은 기관들의 대안으로써 제안한 것이다.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영국) 끊임없이 중국에 타협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그러나 “황금기”는 실현되지 않았다. 캐머런이 집권한 동안 중국이 약속했던 영국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 영국의 대중국 국제수지 적자는 255억 파운드(38조 원)이고, 대중국 수출이 영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겨우 3.1퍼센트에 불과하다.

현재 메이의 브렉시트 이후 “국제적 영국” 구상을 듣다 보면,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는 훨씬 더 긴밀해질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사실 집권한 이후로 메이는 오즈번이 추진했던 중국 기업과의 거래에 냉정한 반응을 보여 왔다(예컨대, 핵발전 산업).

그 결과가 바로 “16+1”로 표현되는, 중·동부 유럽 16개국과 중국의 협력 관계가 부상한 것이다. 유럽연합은 이로 인해 중·동부의 회원국들과 예비 회원국들이 [유럽연합이 아닌 다른] 경제·정치적 중심으로 이끌릴까 우려하고 있다.

남중국해 중국 영토 분쟁에 대한 태도와 대유럽 중국 투자에 대한 새로운 규제 문제를 둘러싼 유럽연합 내부 대립을 보면, 중국의 영향력을



2월 1일 베이징에서 만난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왼쪽)와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오른쪽)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이미 확인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유럽연합은 브렉시트를 맞아 결속하는 모습을 보여려 노력하지만, 실제로는 분열의 압력이 더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래서 심증할구 시진핑은 브렉시트 과정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메이를 압박해 일대일로에 참여토록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메이는 그러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이는 브렉시트 협상이 까다로운 단계로 들어서서 마당에 서유럽의 주요 유럽연합 국가들을 적대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는 미국과의 관계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매튜 쿡맨은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렇게 말했다. “무력 문제로 여기 워싱턴에서는 중국을 향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분위기를 보이하니 미국은 중국을 밀쳐내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 2015년 오즈번은 오바마에게 반향할 자신감이 있었지만, 지금 메이는 트럼프와 같은 줄에 서기를 선택했다. 브렉시트 이후 보수당은 지금보다도 더 미국에 이침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영국 만지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2590호 / 번역 최병현

왜 부패는 끝이지 않는가?

김지윤

한국의 재벌은 대부분 삼성과 비슷한 과정을 밟아 지금과 같은 막대한 부를 쌓았다. 사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핵심 정책들은 삼성을 비롯한 자본가들의 필요에 꼭 맞는 것들이었다. 노동개혁, 의료 민영화, 규제 완화, 노동자 투쟁 제압 등등. 내로라하는 재벌들이 너도나도 미르재단과 K스프츠재단

“글로벌” 기업들은 부패와 비리 규모도 ‘글로벌’하다. 2016년 <하퍼런 포스

트>와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중동의 석유 산업에서 뇌물을 뿌리며 계약을 중개하는 컨설팅회사 우나오일과 삼성·현대 등이 관계를 맺었다고 보도했다. 기업들이 석유 산업 부패의 일부일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선진국이라고 본질적으로 다르지는 않다. 독일의 지멘스는 전 세계적으로 1조 원이 넘는 뇌물을 뿌렸다.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대기업들은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정당이나 대선 후보에게 후원한다. 로비와 모금 등 합법적 방식이지만, 아무런 대가를 바

라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울 것이다.

자본가들은 이윤 경쟁에서의 상이한 이해관계 때문에, 경쟁 기업보다 자사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공 결정 권한은 극소수에게 집중돼 있다. 평범한 다수 대중은 그 소수의 행동과 결정에 근본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자본가들은 중요한 법률과 규칙을 정하고 집행하는 국가 관료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 삼성 X파일 녹취록을 보면, 삼성 이학수와 중앙일보 홍석현은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더라도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말한다. 기업주들에게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나 처우 개선에 드는 비용은 불필요한 지출이지만, 정계에 뿌리는 돈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이기 마련이다.

또한 민영화나 국책 사업 등의 정책 시행은 형식적으로는 합법이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기업들이 득을 본다. 이런 특혜를 보는 기업은 모두 정부 관료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 온 기업이다. 자본가들은 이런 유착의 떡고물을 챙기지만, 노동계급은 민영화나 자본가들의 통제 강화가 낳는 고통을 고스란히 받는다.

자본가들은 경쟁 관계에 있으므로 특

정 정책 결정이 미치는 유·불리가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경제적·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부패 문제가 드러나기도 한다. 예컨대 행정부가 교체되거나 행정부의 통제력이 이완되는 임기 말에 종종 부패 스캔들이 터져 정권과 기업의 유착이 드러나기 일쑤다.

박근혜 정권 말, 노동계급과 피자별자들의 거대한 대중 운동이 순식간에 급성정했다. 대중 분노의 초점이 됐던 한중 박근혜 일당이 수호하고자 하는 체제는 그 자체가 부패의 운산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패가 사라질 수 없는 까닭이다.

Q.영어설명

중·동부 유럽 16개국

냉전 시절 중공권에 속했던 유럽의 중부와 동부 국가들로 상당수는 오늘날 유럽연합과 나토에 회원국이다. ‘16+1’에서 지칭하는 16개 국은 다음과 같다: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보스니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체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사회적 대화 회의론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 주다

2월 6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김명환 지도부가 취임하고 처음으로 열리는 대의원대회였다. 700명 넘는 대의원들이 참석했다. 조합원 수 증가로 대의원 수도 늘어난 데(총원 1127명) 따른 것이다.

내빈도 많았다. 그중 천영세 지도위원 발언이 인상적이었다. 천 지도위원은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노총 개혁파로 노동운동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으로, 전노협 시절부터 지도위원을 도맡았다. 그는 “[자신의] 오랜 경험 덕에 분위기를 잘 읽을 수 있는데, 지금 현상이 꿈틀거리고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노동자 연대〉 신문도 비슷한 계급 세력 관계 인식을 갖고 있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신임 지도부 취임 후 첫 대의원대회이니만큼 사업 계획(특히 사회적 대화 참가) 안건이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대회였다. 김명환 새 위원장과 백석근 새 사무총장은 취임 후 시간 부족으로 안건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으므로, 3월 초에 있을 중앙위원회에서 보완하도록 위임해 달라고 했다.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토론을 되도록 자제해야 지도부를 존중하는 것인 듯한 분위기가 알게 모르게 형성됐다. 그래서 토론을 하면서도,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는 불편한 분위기가 흘렀고, 수정안 발의는 되도록 자제돼야 하는 듯했다.

예를 들어, 한 대의원은 직선제에 대한 평가에 포함된, “변경·지속 여부를 포함한다”는 구절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했다. 선관위는 직선제에서 나타난 난점을 개선하려 해야 하지만 직선제 지속 여부까지 열어 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집행부는 ‘직선제는 규약 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할 필요 없다’, ‘직선제 지속 여부까지 열어 두겠다고 보는 건 오해다’ 하며 수정안 발의를 만류했다. 다른 대의원은 오히려 자신이



2월 6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그 구절을 ‘직선제 지속 여부까지 열어 두는 것으로 이해하며, 그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히기까지 했다. 결국 애초에 삭제 수정안을 내려던 대의원은 수정안 발의를 포기했다.

사회적 대화 필요성 논란

2018년 사업계획 논의는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 그럼에도 한 전교조 조합원인 대의원(여성)이 첫 질의를 당차게 했다. 그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 참가가 새 지도부의 ‘신8자회의’ 공약 위반이라며 노동조합 민주주의와 신뢰 문제를 제기했다.

의장은 유쾌하지 않은 듯한 인상이었고, 장내에는 난처한 기색이 흘렀다. 그러나 이는 분위기 냉각을 뜻하지 않았다. 그 뒤 사회적 대화 문제를 제기

한 대의원들 가운데 두어 명이 첫 발언자 전교조 소속 대의원의 질의를 환기시키며 말을 이어간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교조 소속 대의원의 발언은 사회적 대화 문제 제기의 포문을 열었던 것이다.

이어서 좌파적 대의원 여러 명이 사회적 대화의 이러저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질의들을 이어갔다.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합의가 뭐가 그렇게 다르냐?”(김명환 지도부는 사회적 대화 기구 재편이지 사회적 합의 기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조합원들은 TV로 대통령-김명환 면담을 봤을 뿐이니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말해 달라.”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 정부 측은 최저임금 제도 등을 언급하던데 민주노총이 제시한 의제는 무엇인가?”

김명환 새 위원장은 공약 위반 여부 질의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웅색한 답변을 했다. 대략 이랬다. ‘노사정 위 복귀 불가 입장은 지금도 분명하다. 선거 기간에 대통령과 국회의장 포합해 (신8자회의) 제안했던 것 맞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든다. 그래서 대통령 면담 먼저 했다. 국회의장 면담은 이후 잡혀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은 따로 만나는 것으로 하고 6자회의를 수용했다는 취지인데, 노사정위원장 포함 문제를 회피한 셈이다. 선거 운동 때 김명환 위원장 후보는 노사정위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 논의에 포함되면 죽어가는 노사정위에 영양제를 주는 격이라고 반대했었다.

사회적 대화와 관련된 다른 질의

들에 대한 새 위원장의 답변은 지나치게 일반적이었다(그래서 어렵풋했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딱 30분 했다. 보도자료 이상도 이하도 더 한 얘기는 없다. 본인은 사회적 대화만으로 사회적 악을 제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들 교섭해 봐서 알겠지만, 교섭에서 쟁점을 분명히 하고 결렬되면 철차 밟아 투쟁하는 것이다. 사회적 대화가 양보 교섭을 전제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회적 총파업을 했지만 사회적 교섭이 없었던 것은 문제다.’

위원장 답변 후 사회적 대화 부분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됐다. 뒤이은 찬성 발언자(금속노조 소속)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 참가가 중점 결정으로 정해질 일이 아니라는 것, 지난 노사정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노동자들 첫 파업

“진짜 사장 우정사업본부가 처우개선·직접고용 책임져라”

신정환

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인 우체국시설관리단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이 첫 파업에 돌입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국 1300여 개 우체국의 미화원, 우체국 청사·금융경비원, 건물과 우편 기계를 정비하는 기술원 등이다. 우정사업본부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이들의 노동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이 노동자들은 모두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 임금의 3분의 1밖에 못 받는다. 수당, 병가 등에서도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

노동자들은 이번에는 꼭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파업에 나섰다. 식사비 월 13만 원을 온전히 지급할 것, 기술원 임금 8퍼센트 인상, 장기근속수당 인상, 병가 확대, 본사와 동일하게 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들은 회사가 식사비를 “뽕팡”치는 것에 매우 분노하고 있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식사비 월 13만 원을 우정사업본부에 지급했다. 그런데 이 식사비가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시설관리단을 거치면서 6만 1000원으로 반토막 난 것이다. 노동자들은 “우리의 투쟁으로 쟁취해 낸 식사비를 왜 회사가 ‘뽕팡’치냐”며, “내 밥값 내놔” 하고 요구하고 있다.

2월 5일 서울 포스트타워 앞 파업 돌입 기자회견에 모인 파업 노동자들은 기세가 좋았다.

포스트타워에서 미화원으로 일하는 한 여성 노동자는 파업에 나선 이유를 절절하게 밝혔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 뺄까 부서지게 노에 취급 받으며 일만 해왔다. 그런데 식사비는 반토막 나고 회사는 돈 없다며 우정사업본부에 상납금을 바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바뀌는 게 없어서 이 자리에 모였다.”

우정사업본부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정규직 공무원이 하던 일을 자회사에 넘겨 비정규직을 고용해 왔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예산을 남기고, 이를 원청인 우정사업본부에 반납해 왔다.

따라서 우정사업본부는 책임지고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자회사 고용 방식에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으므로, 우정사업본부가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자회사 고용을 정규직 전환 방안이라고 내놓는 것이 왜 문제인가를 알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 박정석 지부장은 이렇게 호소했다. “우리는 원청의 업무 지시를 직접 받아 일하고 있다. … 그런데 우리는 자회사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서도 배제됐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을 해체하고 직접고용 쟁취하자!”

우체국시설관리단 사측은 파업 2일째, 노조에 기술원 임금 8퍼센트 인상, 병가 10일로 확대 등 일부 양보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온전한 식사비 지급과 제 수당 확대 등에 대해선 여전히 돈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노동자들은 이정도 안으로는 불충분하다며 파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파업 돌입 이후 조합원도 늘고 있다. 단호히 싸운다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노조는 2월 8일 오전 11시 세종시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전 조합원 파업 집회를 개최한다. 우체국시설관리단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전문은 온라인 기사를 보시오.



취임 이후 첫 대의원대회를 주재하는 김명환 위원장(오른쪽)

위 결과들을 알기 때문에 우려한
다는 것, 현재 학교비정규직 부문
에서 벌어지는 일(정규직 전환 제
외)이나 한상균·이영주 수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와 다를
바 없음을 보여 준다는 것, 투쟁으
로 돌파하자 등을 주장했다.

수정안은 재석 인원 618명 중
192명의 찬성을 받아 부결됐다.
하지만 찬성률 31.1퍼센트는 만만
찮은 비중이다. 30퍼센트가 넘는
대의원들이 대화보다는 투쟁에 분
명한 우위를 뒀야 한다고 생각하
는 것이다. 신임 지도부가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상황임을 감안
하면 30퍼센트의 의미는 상당한
것이다.

비정규직의 부상

그 밖에도 의미 있는 질의 또는
주장들이 있었다. 특히 비정규직
투쟁과 관련된 주장들이 그랬다.
교육공무직 대의원은 비정규직 투
쟁의 기초를 '양극화 해소'라는 점
에서 다루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

다. 그는 비정규직들이 정규직 받
그릇을 문제 삼은 바 없다며, '양극
화 해소'가 아니라 '정규직화' 투쟁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를 했다.

또한 그는 최근 학교 비정규직
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도 정책
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를 심각
하게 봐야 하는데, 이를 전혀 다
루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정규직이 조직되려면 희망이
보여야 한다"며 "[비정규직 제도]
약속 이행 촉구" 투쟁 계획을 마련
하라고 요구했다.

현대중공업 소속 대의원은 투쟁
계획 안에 구조조정에 대해 한마
디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사
람(전교조 소속)은 민주노조가 경
영참가나 공동결정제도 확대 등
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냐고 비판
했고,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
직화가 아니라 비정규직의 폐지를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상시업무
만 정규직화 대상으로 보는 것을
비판하는 취지인 듯).



부패한 낙하산 회장이 착륙할 곳은 구치소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 드러난 KT 황창규 회장을 구속 수사하라

이원준 KT전국민주동지회 회원

2월 5일 회사 공금으로 국회의원들
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
난 KT 황창규 회장의 퇴진과 구속 수
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황
창규 회장 퇴진 등 KT적폐 청산을 위
해 시민·사회·노동단체 33곳이 모
인 KT민주화연대와 KT전국민주동지
회 소속 노동자들이 대거 참가했다.

MBC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KT는
2016년 9월경 황창규 회장의 국정감
사 증인 채택을 피하려고 국회 정무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
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했다고 한다. 로
비 과정에서 황창규는 회사 돈으로 구
입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소위 '상품
권 강'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 임
원 40여 명을 동원해 개인 후원금을
내는 방식으로 위장해 국회의원들에
게 정치후원금을 제공했다.

그밖에도 황창규가 구속 수사를 받고
처벌받아야 할 사유는 차고 넘친다. 황
창규는 박근혜가 만든 재단에 회사 돈
18억 원을 헌납했으며, 최순실의 측근
을 광고 담당 임원으로 낙하산 임명해
광고비 68억 원을 관련 회사에 몰아줬
다. 황창규는 지난해 KT노조 임원 선거
에 친사측 성향의 위원장 후보를 직접
'낙점'하는 등 불법적으로 개입했다.

기자회견에서 KT전국민주동지회
활동가 정연용 본사지방본부위원장은
이렇게 폭로했다. "정권의 낙하산으로
내려온 경영진들이 통신 공공성은 내
팽개치고 정권의 이익과 개인의 사익
만을 추구해 온 것이 바로 KT 민영화
의 역사이자 현실이었다." 또 그동안
KT노조가 사측을 비호하며 황창규의
불법을 눈 감아 주고 오히려 연임 지지
성명을 낸 것도 비판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KT 민영화
이후 15년간 KT 노동자들이 탄압받
아 온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촉발의
시대정신에 맞게 황창규를 구속 수사
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안전결 공동사무처장도 황창규의 즉
각 퇴진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KT노조 대의
원 선거에 출마한 민주파 후보들과 선
거운동원인 KT 노동자들이 대거 참
가했다. 지난해 KT노조 임원 선거에
서 황창규 퇴진을 요구했던 정연용 활
동가가 본사지방본부위원장에 당선한
것은 황창규에 대한 비판이 노조 내 소
수일 뿐이라는 사측의 주장이 거짓임
을 보여 준다. 이번 대의원 선거에서도
민주파 후보들이 많이 당선해 황창규
퇴진 흐름이 확대·강화되길 바란다.

기자회견 도중, 경찰이 KT 광화문 사
옥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황창규를 수사하라는 내·외부의 정치
적 압력이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황창
규의 퇴진은 8000여 명 규모의 강제 구
조조정, 임금과 복지의 후퇴 등을 겪은
KT 노동자들에게 통쾌한 일이 될 것이
다. KT의 민주파 활동가들은 황창규 회
장의 퇴진을 위해 투쟁하면서도 황창규
의 위기를 이용해 KT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서평! 《조난자들》
탈북민은 모두 우파라는
오해를 깨트리는 필독서
- ★ 채용비리 등 적폐에 맞서는
KB 노동자들의 투쟁
- ★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살아남으려 이민자 공격하는
트럼프
- ★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전쟁에 반대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죽음들
- ★ 제1차세계대전 연재 ④
제1차세계대전과 식민지 반란

18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맑시즘
2018

7월 19일(목)~22일(일)에
서울에서 열립니다

주최: 노동자연대

문의 : 02-2271-2395, 010-4909-2026(문자 가능), marxism@marxism.or.kr

www.marxism.or.kr



해외연사 **로라 마일스**

영국의 트랜스 여성으로 노동조합 활동가이자 마르크스주의자다.
대학 강사 출신으로(현 67세) 대학노조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2015년까지 대학노조(UCU) 전국집행위원이었는데, 영국 최초로 노동
조합 전국집행위원으로 선출된 트랜스젠더였다. 또, 대학노조 내 사회
주의자들과 좌파들로 이뤄진 'UCU좌파'의 사무국장을 지냈다.

맑시즘2018에서 연설할 주제

- ▶ 트랜스젠더와 마르크스주의
- ▶ 페미니즘과 마르크스주의
- ▶ 심리학과 마르크스주의
- ▶ 신자유주의가 교육과 교육 노동자에게 끼친 해악과 그에 맞선 투쟁
- ▶ 노동현장에서 차별에 맞서 싸우기 (개막 집회 연설)

이 밖에도 노동운동·사회운동 활동가, 진보·좌파 저술가들 수십 명이
오늘날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수십 개 알차 주제로 맑시즘2018에서 발제합니다.

※ 발제자와 주제가 웹사이트(www.marxism.or.kr)에 업데이트됩니다.



끊이지 않는 산재 사망 사고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체제가 낳은 참사

박설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 센터,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고 빼 풀린 안전규제'가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연말 연초 산업 현장에서도 중대 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한 달 알려진 산재 사고만도 십수 건에 이른다. 포스코에서 질소 가스 누출 사고로 하청 노동자 4명이 질식사 했고,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여파 속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가 화재·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관련 기사: 본지 235호 '잇따른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 "무분별한 휴업으로 인한 인력 부족이 비극을 낳았습니다"')

이 밖에도 동국제강, 현대차 아산공장 협력업체, 세아특수강 협력업체, 동해레미콘, 프로그램테크 등에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장에서 벌어진 사망 사고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조건에 내몰려 있는지를 드러냈다. 지난해 12월 임신 3개월의 아내를 둔 27세의 한 정규직 노동자가 설비 보수 작업 중 기계 장치에 몸이 끼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 상태에서 다시 설비가 움직여 머리까지 기계에 빨려 들어가 끔찍하게 숨을 거뒀다. 만약 1차 사고가 있었을 때 즉시 설비를 멈출 비상 스위치가 있었다면, 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안전 장치가 전혀 없었기에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운 죽음을 지켜봐야만 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노동부 천안지청은 사망 사고 이후 하루가 지나서야 그것도 부분적으로만 작업 중지명령을 내렸다. 노조의 항의로 6일 뒤에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그 사이 같은 공장에서 유사한 작업을 하던 다른 노동자가 사고를 당했다.

이런 죽음들은 자본의 이윤 물이 속에서 노동자들을 참담하게 희생시키는 체제의 야만성을 보여 준다. 포스코가 "매출액 60조 원 복원"을 자랑하는 동안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안전망도 없이 방치돼 유해가스에 노출되고 폭발사고에 희생돼 죽거나 다쳤다. 인공 지능이니 우주 탐사니 하는 얘기들이 무성한 가운데, 노동자들은 기계에 끼여서, 추락해서, 구조물이 붕괴돼서 목숨을 잃었다.

“산재 왕국”

정부 통계를 보면, 2016년 한 해에만 산업재해자수가 9만 656명, 사망자수가 1777명에 이른다.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일 같이 377명이 재해를 당하고 7~8명이 목숨을 잃는 것이다.

이조차 상당히 은폐된 수치다. 한국은 OECD 평균 3배가 넘는 산재 사망



산업재해로 억울하게 떠난 동료 노동자를 추모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자가 발생하는 나라인데, 이상하게도 재해율은 OECD 평균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중대재해가 아니면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기도 어려운 것이다.

사망자 통계도 축소돼 있다. 정부가 산재보험 보상 통계만을 집계해 다른 보험체계에 있는 집배원 과로사, 소규모 건설 공사, 특수고용 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그마저 2012년부터는 사업장 밖에서 벌어진 업무상 사고(운수업 등에서는 특히 치명적이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어 사망한 경우 등을 제외해 사망자가 이전보다 매년 200~300명가량 감춰져 있다.

그런데도 한국은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산재재해 왕국”이다. OECD 국가들의 노동자 10만 명 당 산재 사망자 현황을 보면, 일본 1.7명, 미국 3.3명, 멕시코 7.9명인데, 한국은 무려 9.0명이다.

무엇보다 의미 심장한 대목은 은폐·축소된 정부 통계조차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이다. 2~3년 전부터 산업재해율과 사망 만인율은 감소세가 중단되고 거의 정체 상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2010~2011년부터 좀체 줄지 않고 있는데, 심지어 2~3년 전부터는 사고 사망자가 조금씩 늘고 있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2009년부터 재해율이 크게 높아졌다.

이렇게 된 이유는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사용자들이 안전 투자와 인력을 축소하고,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각종 안전 규제를 완화해 온 데 있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기업의 이윤 보장을 위해 추진한 규제 완화는 그나마 있던 안전벨트조차 풀어 버렸다. 산재 보고 의무와 처벌규정, 안전검사, 안전보건 교육 등이 완화되거나 면제됐

다. 이 속에서 사용자들은 산재를 은폐하기가 더 쉬워졌고, 각종 안전 규정을 위반하기 일쑤였다.

외주화

특히 안전관리 업무의 민간위탁은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 정부는 2008년부터 타워크레인 규제 완화로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던 안전 검사를 민간에 위탁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설치·해체 작업을 외주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만 70여 명이 타워크레인 사고로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다.

중대재해가 빈번한 조선업종에서는 수년간 지속된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줄고 외주화가 확대된 것도 큰 몫을 했다.

외주화 확대, 단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산업재해의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정부가 자세한 통계를 내지는 않지만, 비정규직 산재 사망률이 정규직의 2.5배가량 된다는 조사가 나온 바도 있다(안전관리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안전보호장구에서도 차별을 받고, 사고를 당해도 제대로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이런 현실을 두고, 일각에서는 “원청의 노사 담합, ‘공생관계’가 하청 노동자들을 위험으로 내몬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측만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도 고강도·위험 업무를 피하려고 그것을 하청 노동자들에게 떠넘긴 책임이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단단계 하청구조는 원청이 비용 절감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청 기업에 떠넘긴 결과다. 이렇게 되면 안전 투자는 뒷전이 되고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다. 어느 한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노동조건이 후퇴 압박을 받고 현장 통제권도 약화되기 십상이다. 함께 협력해 일해야 하는 노동

자들(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게 만들어 각종 사고를 내고 대응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더구나 정규직 노동자들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우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외주화·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사용자들의 책임을 의도치 않게 덜어주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불충분한 문재인 개혁

산업재해의 심각성 때문에, 문재인은 지난해 7월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선언하고,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과 작업중지 명령 운영

기준, 타워크레인 안전 예방대책 등을 발표했다.

이런 개혁안들은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중대재해가 벌어진 곳에서는 노동부가 직접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명박근혜 정부하에서는 거의 볼 수 없던 일이다.

그러나 그 조치가 불충분해 곳곳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각 노동부 지청들은 작업 중지 대상을 일부분에만 한정하거나 늑장 대처로 위험한 조건 속에 노동자들을 방치하곤 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작업장에서 충분한 안전실태 점검과 대책 마련 없이 단 며칠 만에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해 버렸다.

문재인은 이런 노동부의 행태를 즉각 시정하기는커녕 그냥 보아넘기며 실질적인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중대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안전업무의 외주화 금지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고, 심각한 사고 위험에 내몰려 있는 특수고용·파견 노동자 다수를 정책 대상에서 제외한 문제도 있다.

타워크레인 안전예방 대책은 민간 위탁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가 하면, 조종사에게 과실의 책임을 묻는 조치들(면허 취소로 쉽게 하기, 노동자 감시 강화)을 담아 건설 노동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산재 예방을 표방하지만, 안전보다 돈벌이를 우선하는 이윤 논리, 안전규제와 투자를 '수익성을 제약하는 낭비'로 여기면서 노동강도를 높이고 생산 제일주의를 추구하는 기업주들에 정면 도전하지 않는 한은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안전대책과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해 나가려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중요한 이유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을 노동자 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융·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이메일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종교동교회 | ☐ 기타)

[선택] 휴대전화번호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